

對外秘

안보포커스 2017-05

안보통일센터

미국민 대상 對北인식 여론조사의 시사점

2017. 7. 17



SECURITY FOCUS

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
여의도연구원
THE YEUIDO INSTITUTE

□ 美 정치전문지 폴리티코·모닝컨설트의 북한 관련 여론조사 내용¹⁾

[조사기간(7.12, 현지시간), 1983명 대상, 오차범위 ±2%p]

- 미국안보에 최대 위협 세력 : 북한
: 북한(40%) > IS(30%) > 러시아(16%) > 중국(5%) > 이란(3%)
※ 특히 65세 이상 응답자 50%, 55~64세 42% 등 고연령층일수록 북한 위협인식이 높았으며, 18~29세에서는 30%가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음
-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폭격 찬성 : 49%
- 북한에 美 지상군 투입 찬성 : 33%
- 對北 추가제재 지지 : 75%
-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찬성 : 72%
- 응답자 83%,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을 접했다고 답

□ 시사점

- 여론조사 발표는 미국의 북한 공격 명분 축적 및 對중국 압박용?
 - ✓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('America First')에 대한 미국민의 동조
 - ✓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(개발 완료 임박), 북한의 연이은 對美 핵·미사일 공격 가능 천명 및 미국 조롱 등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위한 대내외용 명분으로 충분
 - ※ 역사적으로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공개 천명한 사례는 舊소련과 북한 2개국뿐
 - ✓ 오래된 평화국면(long peace) 지속으로 미국사회內 反戰 여론과 심리의 약화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완화
- 그러나, 미국은 對北 폭격을 위한 다음의 조건들이 성숙될 때 북한 폭격에 나설 수 있을 것임

1) 조선일보(7.14)

- ✓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확실한 억제(대응) 자신
- ✓ 한국·일본에 주둔 또는 거주하는 미군과 미국인들의 신변 안전 장치 마련
- ✓ 중국의 개입 저지에 대한 자신 등
 - ※ 전쟁은 승리를 ‘확신’하고 勝戰을 ‘확인’하기 위해서 하는 것

-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인식 주목

- ✓ 공화당 정강정책, 북한을 ‘노예국가’로 규정
- ✓ 트럼프대통령, 김정은정권은 ‘잔혹한 정권’으로 비난
- ✓ 매티스 美국방장관, 북한은 “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”
- ✓ 해리스 美태평양사령관, “김정은의 손 안에 있는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은 ‘재앙의 조리법(recipe for disaster)’”이라며,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“군사적 선택지는 항상 준비돼 있다.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한 상태”라고 함

- 이 점에서, 최근 미국의 새로운 무기, 곧 해군 구축함 장착 ‘레일건’의 성능 고도화에 특히 주목

[레일건]

- 화약 대신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, 기차길처럼 나란히 있는 레일 두 개 사이에 발사체(탄환)를 놓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발사
- 음속보다 빠른 발사 속도와 긴 사거리, 높은 관통력으로 인해 차세대 첨단 무기로 주목
- 레일건에서 발사한 탄환의 속도는 분당 160km 정도로 음속보다 빠르고,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파괴력이 매우 크고 방어가 어려움
 - ※ 美 해군연구처는 레일건이 약 11kg 무게의 텅스텐 탄환을 10.6m 길이의 포신에서 발사하면 시속 7,0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발표, 같은 조건에서 사거리는 약 200km
- 특히,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
- 美 해군은 2018년 취역 예정인 줌왈트급 구축함(Zumwalt-Class Destroyer)에 레일건을 장착할 계획
- 또한, 美 해군은 병사의 개인병기로 사용 가능한 소총형 레일건 개발도 진행

- 미국의 북폭 임박 징후時, 文정권을 비롯한 진보좌파진영의 강한 반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內 ‘평화 對 전쟁’ 구도의 남남갈등 심화 우려
- 文정권의 反美 또는 비협조時, 미국은 북한문제를 한국보다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으며, 그 연장에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(특히, 경제) 예상
 - ※ 미일동맹이 한층 강화됐고 또 아베수상이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親美·극우적 성향으로 보아 미·일 공조의 대북정책 가동 가능성 높음